투데이 칼럼

검찰개혁, 올해가 마지막

곽 보 경
칼럼니스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구(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과제였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 사안을 관철시켜 검찰 개혁을 성사 시키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예의 임기 3개월을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적인 반기와 검찰의 완강한 저항에 또 직면했다. 기득권 권력은 이렇게 완강하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만 9년 검찰의 현실은 김학의 류(類) 검사 득세와 윤석열 검사 좌천이 상징한다. 검사다운 검사는 소외되고 정치검사가 득세하는 게 현실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며 청와대가 일체 검찰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재임 중에 꼽은 노무현 대통령은 기실 검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상적인 관념'이었다.

이명박 집권 이후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협잡으로 유야무야 흥정의 대가가 되면서 '알아서 기는 시늉의 고위직 정치 검사들'은 이명박의 암묵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서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로 역습을 가하고 노 대통령은 거의 피습을 당하다시피 최후를 맞는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사들의 횡포는 '하이에나'식의 물어뜯기 였다. 대통령 퇴임 15개월만에 처절하게 자살한 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대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조의를 표하지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고 도리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살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죽음의 엄연한 본질은 이명박과 정치 검찰에 의한 직접적인 표적수사, 곧 정치타살이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검사 중에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논두렁 시계사건 보도는 국가정보원 작품"임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으로 도피 중이다. 해외도피설을 부인하는 이인규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조사요청이 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논두렁 시계사건 보도와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의 잘못이라는 점을 이인규는 재차 강조했다.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논두렁 시계' 보도는 "2009년 4월14일 퇴근 무렵 국정원 전 직원 강 모 국장 등 2명이 저를 찾아와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인규는 밝혔다.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그가 지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단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앞장섰던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명박 정권의 눈에 들어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변호사를 하던 중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겨우 2년형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문제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현재 감옥에서 나와 재판 중이다. 이게 오늘 현실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동일체의 카르텔을 강화시키는 검찰 관습 촉매제가 됐다.

이런 검찰 현실 내부에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이 한 검사로부터 나왔다. 놀라운 발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의미로 "견제와 균형으로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그나마 '살아있는 검사'가 검찰 내에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런 검사가 몇 명이나 검찰 내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말이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며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했다.

갈라파고스에는 오랜 세월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밟아 온 독특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검찰도 별만 다른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달래기'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엔 단임제 정권의 한계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검찰개혁은 2019년이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사 설

계속되는 인구 감소 추세 고민해야

계속되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민해야 겠다.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희망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하면 인구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군산을 위기 특별지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지만 피부에 느껴지는 효과라는 게 미미하다. 나랏돈을 풀어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나타냈지만 난항의 연속이다. 고용 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게 단지 군산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다른 지역은 우리 전북의 경우보다는 낫다. 경남 쪽만 해도 5곳이나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통영시와 고성군 그리고 창원시의 진해구와 울산광역시의 동구가 바로 그렇다.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산에 지원된 금액은 그 피해애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수준일 뿐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발언이라도 도민들은 마음이 급하다. 전북도의 그 전략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줄 일이다. 도민들은 거듭된 경제 우환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 적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북도는 힘을 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안 좋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는데 전력투구하지 않는 것은 기대밖이다. 해결해야 할 일거리가 산더미라 그러리라는 짐작이지만 더 다급한 쪽에 전북도는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자존을 말하고 제몫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그 곤란한 일이란 바로 인구 감소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참으로 난감하다.지금 전북도가 이루어낼 목표는 뚜렷하다. 군산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잘 안 된다면 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언론사들의 인구 동향 보도에 민감해야 한다. 올해 1/4분기만해도 수천 명의 인구가 유출됐는데 군산에서도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전북도 날마다 긴장 모드가 되어 마땅하다는 주문이다.

도내 영세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전북도가 영세 기업들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힘들다는 호소가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전북도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기업이 잘 나가야 경제도 나아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그리고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이 어떤지 파악해야겠다. 지난 십 수년 간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여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니와 군산 경제의 몰락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현대 중공업과 GM도 그렇지만 협력 업체들의 몰락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답답하다. 새삼스럽다 할 만큼 오래된 사건을 두고 다시 말하는 것은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급한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당부는 저번에도 했던 바이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영세 기업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역의 영세 기업들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그럴 터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전북도가 군산 살리기를 최고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쪽 하도급 업체 등 영세기업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으로 기업 생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영세기업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영세 기업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독자제언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져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던 것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되도록 운전면허 취소 및 처분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110만8193건 중 약 10.3%를 차지하는 11만4317건이 음주운전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잔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음주운전 근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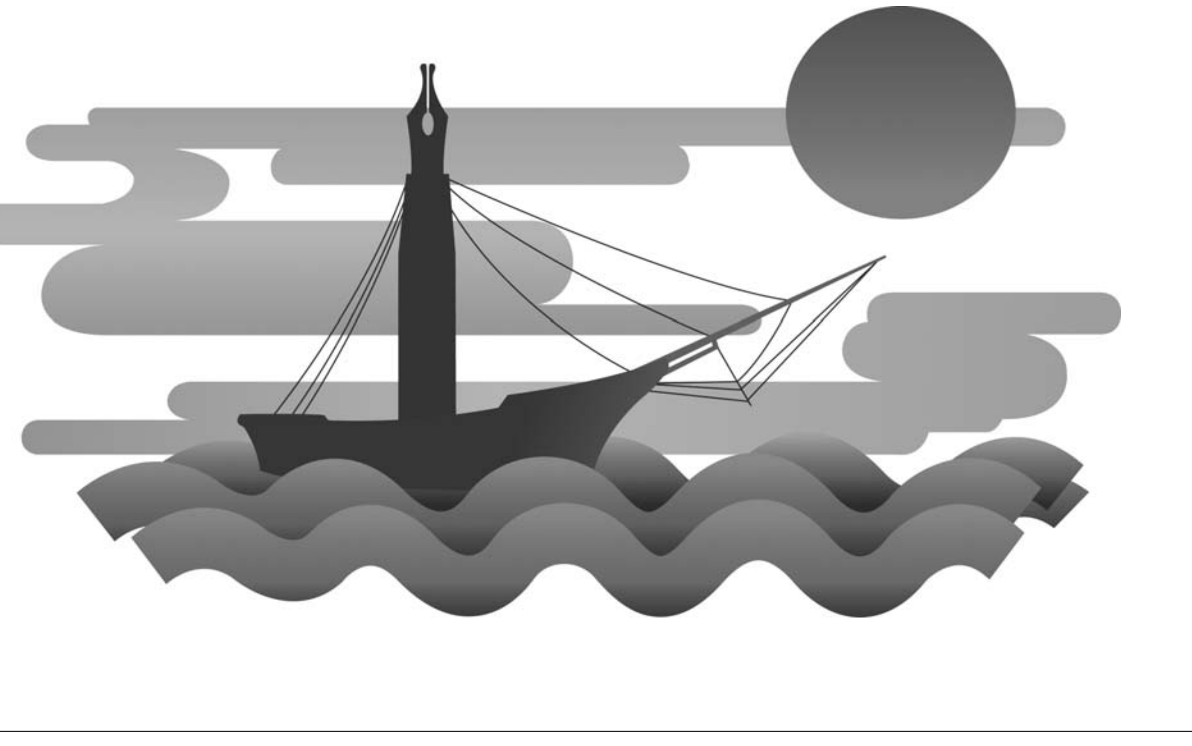
김두연 장수경찰서 수사지원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여성 신발 신고 1마일 걷기' 동참 남성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2019 여성 신발 신고 1마일 걷기'(Walk a Mile in Her Shoes) 행사가 열려 하이힐을 신은 남성들이 걷고 있다. 성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열리는 이 연례행사에 500명이 넘는 남성이 참가해 뜻을 같이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